

뺏어라도 먹으라는 '오리고기'

서양에선 최고급 요리... 최근 '건강식' 각광...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성인병 예방 효과



“돼지고기는 누가 사 준다면 먹고, 닭고기는 내 돈 주고 사 먹고, 오리고기는 남이 먹고 있는 것이라도

뺏어 먹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오리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뜻일 게다.

요리로 유명한 중국이나 프랑스 등 서구에서는 오리고기가 오래전부터 최고급 요리로 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와 독특한 맛 때문에 닭을 더 즐겨 먹었다. 우리 속담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다. 닭을 잡아먹었느냐는 추궁에 “아니, 오리 먹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얘기가. 닭값이 오리값보다 비쌀 때 생긴 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최근 오리고기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닭보다 더 귀하고 값나가는 몸이 됐다.

오리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잘되는 영양식이다. 100g 기준으로 단백질 16g, 지방 27.6g, 칼륨 233mg, 칼슘 15mg, 비타민B 0.21mg, 비타민B 0.31mg 등이 들어 있다. 오리고기에 지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60~70%가 불포화지방산이다.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고혈압을 막아 주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없고 닭고기에는 30~40%가 들어 있다. 오리고기가 다른 육류보다 ‘한수 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오리고기는 육류 가운데 유일하게 알칼리성 식품이다. 육류 섭취 증가로 산성화돼 가는 몸의 영양균형을 잡아 주고 노

화 방지와 피부미용,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필수아미노산의 구성이 좋은 고단백 식품인 오리고기는 성장기 어린이·수험생·노약자·고혈압·골다공증 환자 등에게 권장된다. 다만, 오리는 찬 성질을 가진데다 지방 함량이 높아 다른 찬 음식과 먹으면 소화 잘 안되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은 피한다. 오리고기를 먹고 난 후엔 찬 성질을 보완해 주기 위해 대추차 등을 마시면 좋다. 한편 오리기름을 다이어트의 적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오리고기의 열량은 100g 당 318kcal로 닭고기의 118kcal보다 높지만 지방 자체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돼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기름이 부담된다면 기름이 집중돼 있는 껍질을 벗겨내고 먹으면 열량을 낮출 수 있다.

농민신문·노현숙 기자·rhsook@nongmin.com·2010.8.30

축산업 관련 세제·법령 개정 건의안 제출 축산 6개 단체, 절실한 19개 사항 반영 요청

축산관련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축산업 세제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한국양육협회(회장 강준수) 등 6개 단체는 축산업 관련 세제 및 법령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공감하고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19개 항을 건의안에 반영했다.

6개 단체는 건의안을 통해 비과세 되는 부업소득공제 액수를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축종별 부업규모 공제두수를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 한육우·젓소는 30두에서 80두, 닭·오리는 1만5,000수에서 2만5,000수로 각각 확대하고, 사슴은 신규로 80두까지 공제 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영세울 또는 환급 대상에 분만틀, 환기장치, 난방기기 등의 축산용 기자재를 추가하는 한편 겨울철 축사난방용 유류에 대해서도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축산관련 건축물의 건축 용역을 신설할 것과 축사가 가축 배설물로 인해 일반 건축물보다 부식이 빠르고 방역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개축이 활발한 실정을 고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40년에서 20년으로, 벽돌건물의 경우에는 20년에서 10년으로 사용 연수를 50% 단축해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밖에 가축의 내용 연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축산 시설물과 동일한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 실제 가축의 생존 가능 연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실제 사육수명에 맞게 소와 말은 3년, 나머지 가축은 2년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6개 단체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6~33%에 해당하는 소득세 경감 효과가 나타나 FTA 확대 추진 등에 따른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6개 단체가 건의한 19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 확대 ▲목장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목장용지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목장용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 범위 완화 ▲축산업 기업상속공제 허용

▲축사건축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위탁사육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축산기자재 추가 ▲가축 내용연수 신설 ▲축산용 건축물 내용연수 단축 ▲가업승계 증여세 감면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농업법인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허용 ▲농업법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 완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업법인의 증자등기 등록세의 감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영농조합법인 감면소득 확대.

축산경제신문·한정희 기자·penery@chukkyung.co.kr·2010.8.27

중오리 DB구축·사육방식 개선 통한 생산성 향상

○농식품부 '축종별 생산비 절감대책 - 오리'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업이 개방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산비도 절감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비용절감 대책을 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순으로 정리한다.

·생산·수급 현황

2009년 생산액은 1조2천323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을 중시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축산물로 2004년 AI 발생으로 소비위축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리고기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었으나 국내 발생된

AI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상태.

• 생산 단계

■ 오리생산비 절감 추진 목표

구분	2009년	2012년	2014년	
생산성	출하체중	3.2kg	3.3kg	3.4kg
	출하일수	43일	41일	39일
	계열화비중	90%	92%	93%
유통개선	등급판정 의무화	기준마련	시범운영	전면시행

※종중별 낭비요인을 발굴해 2014년까지 최대 30% 비용절감

종오리(PS)농장은 외국으로부터 종오리 초생추를 수입하여 생산하고 있다. 일부농가는 자가교배를 통해 부화한 교대잡종(F1)을 산란용 오리로 사육하고 있다. 사육농가수는 감소추세이나 전업화 및 규모화로 전업 농가 사육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새끼오리 산지가격은 타 축종에 비해 등락폭이 크며, 이는 전국 종오리농장(107개소)의 사육수수 등 수급 예측을 위한 시스템 미흡이 원인이다. 오리바이러스성 간염(DVH), 리메렐라 감염증(오리패혈증), 살모넬라 등이 오리 사육시 폐사율이 높은 질병이다. 2008년도 육용오리 생산비는 5천321원.

• 유통 단계

오리고기의 80% 정도는 요식업소를 통해 유통되며, 20% 내외가 대형할인점, 단체급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체계이다. 일부 계열업체는 단체급식 및 대형유통 판매 등을 강화하여 유통 채널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오리고기의 유통구조는 일부 가든이나 재래시장에서 자가 도축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업자(대형할인점, 홈쇼핑 등)는 생산업자에 비해 가격협상에 우월한 위치에 있어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신선육은 유통기간이 짧아 대형할인점에 유통의 제한

요인이 많다. 훈제오리 등 가공품은 유통업자의 마진 폭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농가의 수취가격에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도압 후 짧은 유통기한으로 재고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수출 단계

오리고기 수출은 AI발생으로 인해 2007년 이후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많은 물량의 오리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이 가까이 있어 지리적 여건이 매우 유리하다. 일본은 연간 1만5천톤의 오리고기를 대만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오리고기는 여름철이 소비성수기인데 반해 일본은 국내비수기인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 조절에 탄력적인 유리함이 있다.

오리고기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은 현재 AIS 발생국이어서 국내로 오리고기는 수입되지 않으나, 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내 시장의 소비량도 많지만 저임금을 통한 낮은 생산비로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있다.

◎비용절감 대책 및 소득제고 방안

• 생산성 향상 방안

생산비를 2009년 수당 5천916원에서 2013년 5천274원으로 16%를 감축한다. 이를 위해 사료요구율을 2009년 2.25에서 2013년에는 2.0으로 줄이며, 사료 소비량도 2009년 수당 7.2kg에서 2013년에는 6.6kg으로 줄인다.

—생산체계 정립

수급예측을 통해 생산조절 및 산업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농가에 종오리 DB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농가의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통해 정확한 수급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GPS(원종오리)→PS(종오리)→CD(육용오리)의 기본적인 사육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생산단계에서 불명확한 면이 많아 국내에서 PS를 생산하기 위한 원종오리농장을 설립했다. 종오리 사육농가 30명이 출자하여 유한회사인 한국원종오리를 설립한 것. 일부 농가에서는 F1(교잡1세대)을 이용하여 종오리로 이용하고 있어 축산법령 개정으로 개량 및 검정대상 가축에 오리도 포함하고, 종오리업 등록제도 시행한다.

국내 실정에 맞는 종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체계적인 오리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내 종오리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성 향상

질병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대책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농가의 질병관리에 대한 의식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농가의 질병예방을 위한 사육방법을 개선하는데, 육용오리 사육 농가는 올인-올아웃제도를 도입한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깔짚 비용의 절감으로 생산비를 줄인다.

농산부산물의 사료화로 사료비 절감 및 폐기되는 농산 부산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농장 HACCP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각종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유통구조 개선

요식업체 위주의 유통구조를 소가족 소비패턴으로 개선하고, 오리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기·무항생제 축산으로 오리고기의 웰빙 이미지를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축산으로 육성하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차단하고 수입산과의 구별을 유도한다. 오리고기의 등급

제 도입을 위한 생산, 유통시설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 수출확대 방안

일본으로의 재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로 AI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가슴살 등 고부가가치 창출 오리고기 생산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용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한다.

축산신문·김영란기자·ysteel@hanmail.net·2010.8.30

오리산업 성장발전 저해...업계 출혈경쟁 자제해야



양성현 대표(덕산농장)

지금 오리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오리 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 국민들

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면 오리업계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호황을 맞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리 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오리업계 내부의 경쟁은 자칫 이러한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오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업체들 간 경쟁 양상을 보면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고 고품질의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오리고기를 더 많이 찾

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 2010.8.30

되돌아 보는 특수가축산업

◎오리산업

우리나라의 오리 집단 사육은 60년대 중반 전남 나주 지방에서부터 시작됐다.

80년대에는 전남 광주 유동 오리마을을 중심으로 탕 형태의 오리요리 소비가 이루어지다가, 곧이어 부산 지방에서 오리불고기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소비시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91년에는 오리고기가 완전 수입 개방되면서 가격이 싼 수입 오리고기가 대도시 고기뷔페 식당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증하면서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야외 음식점이 부쩍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음식점, 가든 위주의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며 국내 오리고기시장은 성장했으며 1990년대 오리 사육수수가 연평균 34% 증가하면서 1991년 140만수였던 사육수수가 1999년 480만 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증명해 준다.

이러한 증가세로 오리 산업은 200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오리 산업은 총체적 난국에 진입했다.

2001년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AI가 발병, AI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하반기 수입재개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국내 오리 사육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어, 오리고기 소비 성수기임에도 소비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오리값도 생산비 이하로 폭락해 오리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특히 소비가 줄자 사육농가들이 입식량을 줄이면서 일부 부화장들이 갓 부화한 새끼오리를 그대로 폐사시키는 사태까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산지 오리 값이 폭락함에 따라 농림부가 오리 32만 5,000마리 수매를 통해 오리값 안정화에 나섰다.

이어 계열사들도 불황타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서 최초로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오리계열화 전문 업체 화인코리아가 일본 기요카와사 등 2개사에 냉동오리고기 40톤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일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유향오리 전문 업체 해성농산, 충북 모란식품 등이 뒤를 이어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오리고기가 수출 유망주로 급부상하며 다시 호황을 맞이하는 듯했다.

그러나 오리고기 일본 수출이 시작되면서 농가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입식을 늘려가기 시작해 2001년 12월 기준 오리 사육수수는 670여만 마리로 관련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사육수수 500만 마리를 이미 30% 이상 초과, 과잉생산 양상을 보이며 가격세가 하락해 오리 업계는 2002년에 들어 또다시 수급불안정을 도래시켰다.

오리업계는 불황타개를 위해 오리고기 무료시식회, 요리책자 배포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는 한편 축산물 브랜드전을 통해 오리고기 가공업체들이 오리바비큐 등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리협회 수급안정 위원회는 2002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생산되는 종란과 새끼오리의 30%를 폐기 처분기로 결의하고, 부화장과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등 가격 회복에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던 오리업계는 2003년 종오리 20%와 한 달 물량의 20%에 달하는

새끼오리(종란 포함) 감축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했다.

수급불안정 속에 상반기 도축물량이 증가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2003년 1월부터 오리가 의무도축대상으로 지정, 자가 도축 물량이 정식 도축장으로 이전돼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에는 충북 음성군의 한 종계장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오리농장과 산란계농장까지 번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급속히 냉각되는 등 이와 관련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조류인플루엔자 파문은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사업의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전통적으로 주산지에서의 오리소비가 왕성해 오리농법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리는 특정지역에 사육밀도가 집중된 경향이 있어 오리업계는 최악의 불황에서 허덕였다.

당시 오리고기의 직접 섭취를 통해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방송에서 살처분 장면 등이 잔인하게 비춰진 영상이 방영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불안은 극대화됐다.

육계 산업을 표방, 일부 계열업체와 선도농가들이 주를 이뤄 일귀농은 압축 성장을 통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땅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이 없어 총체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리 산업을 대표하는 계열업체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다.

오리 산업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농림부는 2004년부터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오리고기를 포함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로 개편, 수급안정기금을 이용토록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바닥을 치고 있던 산지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 2003년 말부터 15만 마리를 수매한 것에 이어 40만 마리를 수매 하는 등 1일 수매 물량도 1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 수준으로 늘려 출하 지연으로 인한 과체중 발생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오리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극복하고 불황타개를 위해 2005년 말까지 지속적인 안전성 및 소비홍보행사를 펼쳤다.

비로소 오리 산업은 2007년에 들어 정상궤도로 들어섰다.

현재 국내 오리업계에서는 사육규모 2,000수를 기준으로 전업농과 부업농을 분류하고 있는데 2,000수 이상의 오리 사육규모가 전체 사육수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97.4%까지 증가한 반면, 2,000수 이하 농가에서 사육하는 사육수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오리 산업은 전업화, 규모화가 자리 잡은 것을 증명해준다.

오리산업은 규모화 계열화가 자리잡은것에 반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산업의 수직성장만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봄을 이룬 웰빙 바람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에 따른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로 2008년 오리 산업은 생산규모 1조1,544억 원으로 축산업 총생산액 13조5,929억 원의 8.5%를 차지했다.

2008년 발생된 HPAI로 인해 정상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도입수수가 1999년 2,360만수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5,447만 1,000수로 2.3배가 늘어나며 사상최대의 도입량을 기록, 2009년도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축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요식업 위주의 소비패턴을 가진 오리고기의 소비가 단조로운 소비패턴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 매장 판매 강화, 단체급식, 홈쇼핑 등 다양한 소비유형을 활성화코자 한 계열업체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 사육은 육계처럼 계열화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는데, 육계의 계열화 방식만큼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구노력 끝에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오리가 기타가축으로 분류돼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오리업계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산업 제 2의 도약을 위해 후방산업의 재정부 등 산업 발전을 거스르는 약점을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적 뒷받침 이끌어낸다면 오리 산업은 잠재력만 있는 산업이 아닌 축산업을 주도하는 주요축산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경제신문 • 이해진 기자 • Ree@chukkyung.co.kr • 2010.9.03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단속

품관원, 추석 성수품 · 제수용품 집중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 ·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1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인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만 2,00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단계(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유통업체 단속의 사전 단계로써 단속정보 수집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9월 9일부터 21일까지)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 · 소 도시 이상의 중대형 마트, 백화점, 도 · 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은 특히 올해 8월 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축산경제신문 • 한정희 기자 • penergy@chukkyung.co.kr • 2010.9.3

노영운 전북도 축산경영과장

조합 · 단체 유기적 협동 통해 제2도약



“협동조합과 협회, 영농법인 등 축산 관련 기관 단체와 현장 축산인, 관련 산업계는 물론 지자체, 학계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룩할 때 우리 축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전북 축산사령탑에 앉은 노영운 전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축산의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주력하겠다”며 “축산업의 제일의 목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과장은 또 “조사료 생산여건이 좋은 전북도의 한우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양돈 산업의 규모화로 농가당 소득기반 구축과 액비와 축분 자원화, 그리고 오리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영운 과장은 54년생으로 그동안 전북 관내 축산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축산기사 자격증과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축산전문가이다. 85년 옥구군청을 시작으로 남원군 식산과, 임실군 산업과, 전북도 종축시험소, 진안군 안천면장 등을 거치면서 상하 원만한 인간관계와 민원인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온후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축산신문 · 김춘우기자 · 2010.9.4

농정 무게 중심 축산으로...현장목소리 반영 '소통의 정책' 기대

지상공청-유정복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바란다
유정복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난 달 30일 취임했다. 최근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축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새 장관이 축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축산인들에게 새 장

관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축산인들은 새 장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바라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들어본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 오리산업은 ‘축산업계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섭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오리산업은 여러 가지 위기요소와 약점 요인을 안고 있다. 매년 산업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조류 인플루엔자(AI), 내수시장에 국한된 산업형태, 세계 무역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저하, 낙후된 생산 환경과 의식수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오리산업이 이러한 위험요인을 뛰어넘어 흔들림 없는 강건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축산신문 · 2010.9.4

【축산시황-오리】 약보합세 전망

이번달 산지 오리시세는 약보합세

북 시즌이 끝난 만큼 수요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급될 오리고기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한국오리협회가 밝힌 오리시세는 새끼오리(1일령) 1,100원, 생오리(3kg 기준) 7,000원, 신선육(2kg 기준) 8,000원, 토치육(2kg 기준)은 8,200원에 거래됐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42개 부화장 집계결과 7월중 생산·분양된 새끼오리는 727만5,580마리로 전월대비 2.5%감소했으며 8월에 생산될 새끼오리는 755만 3,000마리로 예상됐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오리고기 수요 증가세에 비해 일부 부화장이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급량 증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산지오리시세는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수축산신문 • 최윤진 기자 • yjchoi@aflnews.co.kr • 2010.9.6

日 "한국산 닭·오리고기 수입 재개"

일본 농림수산성은 6일 한국산 닭·오리 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5월21일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닭·오리 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나 방역 조치 결과 한국이 청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 한국산 닭·오리 고기 793t을 수입했다.

연합뉴스 • 이충원 기자 • 특파원 chungwon@yna.co.kr • 2010.9.7

전라도 지역 닭·오리고기... 홍콩수출 재개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올 봄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전남 및 전북지역 닭·오리고기의 홍콩 수출을 7일부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홍콩으로 수출해 왔었으나, 지난 5월과 6월 전남지역과 전북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홍콩정부가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홍콩은 저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도)에 한해 가금육 수입을 중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 방역조치를 홍콩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조기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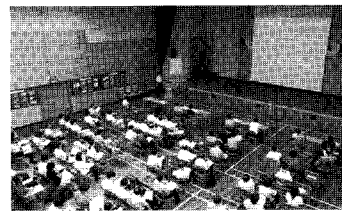
홍콩은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의 수출시장으로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으로의 닭고기 수출은 202톤, 31만1,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수출중단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7월까지 369톤, 51만1,000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수출 대상 국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홍승원기자 • swan@heraldm.com • 2010.9.7

가금도축장 위생관리 수준강화 교육 실시 검역원,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 대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3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검역원 소속 검역관,

지방 공무원, 도축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오리 등 가금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검사관, 책임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HACCP 등 특별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7년부터 도축검사 기능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사관의 검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 왔으나 닭·오리 도축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닭·오리에 대한 생체 및 해체검사를 비롯해 HACCP관리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농식품부 강대진 사무관, 검역원 황인진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축산신문 • 김영길 • young@chuksannews.co.kr • 2010.9.8

산지 오리값 비수기 들어 하락세

산지가 6천500원대... 일주일 새 500원 내려
소비 감소불구 7월 공급량 전년비 28% 증가

오리고기 소비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이던 산지 오리 값이 본격적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7일 현재 산지 오리 값이 6천500원(3kg기준)대로 전주에 비해 500원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지 오리값 하락에 따라 신선육 가격도 8천원대에서 7천500원대로, 토치육 역시 8천200원에서 7천700원대로 떨어졌다. 이처럼 산지 오리 값이 하락한 것은 오리고기 소비가 여름 성수기를 지나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소비가 다소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비에 비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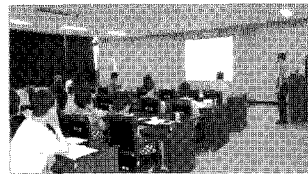
실제로 7월 중 도입실적을 살펴보면 760만8천948수로 전년 동월 593만5천728수보다 28.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까지 누적 도입량은 4천160만수로 전년 동기간 287만6천수에 비해 무려 44.9%가 증가했다.

이처럼 공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지 오리 값이 강세를 보여 왔던 것은 그만큼 오리고기 소비가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산지 오리 값이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동안 텅 비어있던 업체들의 창고에 재고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신문 · 이희영 기자 · Lhyoung@chuksannews.co.k · 2010.9.8

전남축산기술연구소,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 간담회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조상신)는 최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과제 평가위원

원인 이상석 교수(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부)를 비롯 전남지역 축산관련 협회장, 연구담당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에 추진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1년도에 추진하게 될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보다 실용적이고 농가에 접목 가능한 기술 등을 발굴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연구과제 방향제시와 효율적인 연구 추진방법 및 축산관련 협회장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안 등을 발표했다.

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양돈 연구(양돈협회 유흥만 사무총장) ▲유청 혼합사료의 장기보관 연구(낙농육우협회 김용철 전남도지회장) ▲TMR액상사료 보관 어려움에 따른 자체 혼합급여 방법 연구(한우협회 민경천 이사) ▲오리의 바이러스 감염,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기초 연구(오리협회 정정우 전남도지회장) ▲흑염소 기초 질병 및 사양관리 연구(흑염소협회 이경현 부회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남축산기술연구소 연구팀은 기능성 사료 개발을 위한 돼지 함초 급여효과에 관한 연구, 오디뽕을 이용한 오리 훈제 개발 연구, 유청을 이용한 생균제 및 혼합사료 개발 등 생산성 향상 연구 3건과 어린 오리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오리 농장 질병관리시스템 모델 연구, 희수나무를 이용한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실험, 전남지역 흑염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쥐를

통한 살모넬라 질병 전파 근절 방안 연구 등 가축질병 청정화기술 개발연구 4건 등 총 7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 윤양한기자 • 2010.9.8

남원 AI차단 방역 추진 등 농가 교육 실시 전염병 없는 청정 남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

남원시는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정책방향 설명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및 AI 등 가금류 질병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6일(월) 관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남원시 산업축산과장(박용섭)의 설명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농가 대처방안 교육, AI란 무엇인가와 AI차단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축산진흥연구소남원지소 관련담당자의 교육이 있었으며, 육계의 각종 질병과 육계 자조금에 대해 상세한 교육으로 참여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관내의 닭 사육규모는 6,065천수로 전년 대비 8% 증가 추세이며, 연간 소득액은 151억원으로 남원시 농업소득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양계농가의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AI 등 각종 질병의 차단방역으로 한건의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해 전염병 없는 청정 남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남원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 전염병 근절을 위해 2011년 양계산업에 1,13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사시설현대화, 양계기자재 등을 확대 보급해 양계농

가의 생산비 절감과 실질 소득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일보 • 최삼욱 기자 • jbsm@hkbs.co.kr • 2010.9.8

전북도, AI 대비 오리농장 일제 검사

전북도는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여부를 검색하고자 도내 오리 사육농장 전체에 대한 예찰 검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13일부터 10월4일까지 도내 종오리(씨오리) 농장 10곳을 포함해 20마리 이상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AI 항원과 항체를 검사해 도내 유입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 기간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금류의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도 축산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2차례에 걸쳐 모든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AI 검사를 했으며 이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축산연구소는 “오리뿐 아니라 닭 사육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소득과 방역이 필요하다”며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지역 축산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홍인철 기자 • 2010.9.11

닭·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일단 '합격점' 허위표시 적발 5곳뿐... 제도시행 잘인식... 치킨체 인점, 본사차원 적극대응 등 원인

지난 8월11일부터 닭·오리고기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가운데 제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소들이 대체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전북 전주의 한 오리고기 식당에서 냉장보관중인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닭·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8월30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나선 농관원 충남지원도 “지금까지 오리고기 및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닭·오리고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입건된 사례는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한 것이 유일하다. 이 가운데 3곳은 브라질산과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2곳은 미국산을 브라질산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은 해당 업주들이 언론 등을 통해 닭·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로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치킨의 경우 대부분 체인점으로 운영돼 본사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로 표시도 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오리고기의 경우 그동안 중국산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게 돼 국내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오리고기 전문점 ‘신도불이’의 이인혁 점장(50)은 “메뉴판에 원산지가 국산이라는 것을 크게 표시한 후부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산 오리고기를 취급하던 업체들도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수요가 줄자 점차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업소와 달리 영세 개인업소들의 원산지표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가령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에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둘 중 한군데에만 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메뉴명과 비교해 2분의 1 이상으로 쓰도록 돼 있는 규정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농관원 경남지원 부산출장소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치킨 배달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주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거의 알지 못했다. 농관원 부산출장소의 최태호씨는 “체인점은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원산지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은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신문·김용덕 기자·2010.9.15

축산물HACCP기준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10일 중부지원 교육장에서 본·지원 농장심사업무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HACCP 지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심사관들의 사양 관리 및 질병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심사기준 표준화를 통해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실행위주의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는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사양관리, 질병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기준원 관계자는 “농장 심사관들의 정기적인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해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에 대한 현장감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경제신문 • 박정완 기자 • wan@chukkyung.co.kr • 2010.9.17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 실시

HACCP기준원,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초청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 원장 석희진)은 지난 11일 서울지역의 초등학교생과 학부모 39명을 대상으로 ‘HACCP따라 테마체험 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안시에 소재한 오리육가공공장인 다영푸드의 축산물HACCP 위생관리 현장 견학과 함께 실제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소시지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진주목장을 방문해 가축사육단계(농장) HACCP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낙농체험을 실시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아침 일찍부터 쏟아지는 폭우와 잔뜩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축산물 HACCP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축산물HACCP으로 생산된 제품과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체험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가족 모두가 이번 축산물HACCP 체험에 200% 만족했으며, 우리가 흔히 사 먹던 축산제품(우유 등)에 축산물HACCP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노고를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축산경제신문 • 박정완 기자 • wan@chukkyung.co.kr • 2010.9.17

이번엔 “오리농장 결사 반대”

음성 원남면 주민 반발 “생활불편·오염 우려”
군 “동네서 1km나 떨어져 조성… 피해없어”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가축분뇨처리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원남면에 허가된 오리농장을 놓고 지역민들이 생활불편·환경피해 우려를 주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은 동네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피해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원남면 조촌리 1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지난 8월 인근 보천리에 허가된 오리농장으로 인해 냄새는 물론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오리농장이 들어설 곳은 바로 옆 보천리지만 실제 피해는 자신들이 보게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생태보존을 위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물사육 시설을 허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이장에게만 사업 동의를

구하고 실제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의 오리농장은 보천리 198번지 일대에 3,200여㎡(1만 여평)를 만드는 것으로 지난 8월 음성군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고병찬 조촌리장은 “주민총회 등을 열어 대응 계획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 박광호기자 • 2010.9.26

전북,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찰검사

전북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육대수)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10월4일까지 종오리 및 육용오리 사육농장 전체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AI 상시방역체계 운용에 따른 일제검사로, 사전 예방 및 국내 유입 여부 조기검색을 위해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종오리농장 10곳, 20수 이상 사육 농가 120곳이 포함된 육용오리농장 전체이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북방 철새의 도래시기를 맞아 AI 조기검색 및 유입 차단을 위해 닭·오리가 갑작스럽게 많이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했다.

농민신문 • 김윤석 기자 • trueys@nongmin.com • 2010.9.27

태안군, 구제역·시방역 온힘

우제·가금류 사육농가 예찰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태안군은 주변국에서 발생 중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

엔자(AI)의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국외여행객과 각종 가을철 지역 행사로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일제 소독의날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늘려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차단, 예찰, 소독, 점검 중심의 현장방역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국 국외여행을 자제할 것과 귀국 후 5일간 축사 출입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우제류와 가금류 사육농가에 1일 1회 이상 예찰 및 소독을 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소수집·중개상을 중심으로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특히 김세호 태안군수는 지난 간부회의 시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에 근심을 덜어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동남아 여행객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각 농가마다 철저한 자체방역을 추진하고 이상가축과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현황은 이집트 19건 발생에 7명 사망, 베트남 7건에 2명 사망, 인도네시아 3건에 2명 사망, 캄보디아와 중국 각각 1건에 1명 사망 등이다.

대전일보 • 정명영 기자 • myjeng@daejonilbo.com • 2010.9.30